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에 關한 實證分析： 韓國의 境遇(1966~1985)를 中心으로

俞 景 文*

<目 次>

- I. 머리말
- II. 人口移動의 概念 및 測定方法
- III. 人口移動의 決定要因分析을 위한 理論的 模型
- IV.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에 關한 實證分析：
韓國의 境遇(1966~1985)를 中心으로
- V. 맺음말

I. 머리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간의 움직임 즉 移動(migration)에 관하여는 인구학적, 지리학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대부분의 연구가 人口移動과 거리와의 관계나 또는 人口移動과 인종, 성별특성, 연령, 교육 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였으며, 人口移動의 결정요인 및 동기, 규모, 목적지에서의 정착과정 등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가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분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人口移動 결과에 대한 影響 評價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經濟學的 관점에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사람들이 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분석하는 데 있다. 인구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그 사회나 국가의 지리

* 國際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적 공간 속에서 長期的으로 적정한 인구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政策開發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厚生과 福祉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人口移動에 관한 實證的 研究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前提條件 하에서 다루기로 한다. 첫째는 平時的 상황 하에서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구이동 문제를 분석하며, 둘째는 실증분석에 있어 한국에서의 인구이동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끊임없는 移動過程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이동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天災地變에 의한 자연적 재해나 전쟁, 정치·사회적 격변 등에 의한 集團的 또는 強制的 대규모 인구이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관심대상은 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제외한 平時的 상황 하에서 한 개인 또는 가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에 관한 내용이 보편적, 일반적으로 여러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이론이 아님을 밝힌다. 즉 정치, 문화, 역사, 관습 등에 따라 이동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의 人口移動에 관한 연구분석이 다른 나라에 직접 적용될 수가 없으며, 또한 특정한 나라를 分析對象으로 하여도 다른 시대적 배경과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에 그 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를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대상기간은 1966년부터 1985년으로 한다. 1960년대초 이전의 한국의 인구이동은 經濟的 要因 보다는 非經濟的 要因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 침략 후 일제 하에서의 강제적 이동이나, 1950년 6·25 전쟁 기간 및 그 직후의 인구이동은 사회적 혼란기라 볼 수 있어 인구이동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도 經濟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信憑性 및 一貫性이 없어 분석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60년대초 이전의 총괄적인 인구이동 통계자료의 數字的 파악 및 수치의 크기는 당시 사회적 사건의 영향에 대한 結果論的인 상황설명으로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특히 經濟學的인 관점에서 사회현상으로서의 인구이동에 대

한 原因 및 因果關係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1966년도 이후부터 인구변동—이동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진국 상태에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나 아직도 後進經濟狀態에 있는 1966~1970년 사이의 인구이동문제와, 경제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활발히 진행중인 1970~1975년 사이의 開發途上國으로서의 인구이동문제, 그리고 개발도상국 상태를 어느 정도 탈피하여 先進國으로의 進入基盤을 닦고 있는 1980~1985년 사이의 인구이동문제를 비교분석함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인구이동 현상을 분석,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접근이 가능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年齡構造, 男女性別, 婚姻狀態, 教育程度, 農村과 都市地域 區分 등 選別性(selectivity)에 따른 人口學的, 社會學的 分析이며 이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구이동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우선 理論的 側面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첫째로 微視的 觀點에서의 인구이동문제를 다루고, 둘째로 巨視的 觀點에서의 인구이동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즉, 인구이동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微視的 現象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및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巨視的 觀點에서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연구하기로 한다.

인간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은 자신의 환경 즉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制約條件 하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經濟學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效用極大化(utility maximization)를 행동의 원리로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인구이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住居地의 이동은 개인 또는 가족집단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 즉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한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보다 他地域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는 것이 소득, 취업기회, 주택문제, 생활비, 자녀의 교육문제 및 주거환경면에서 보다 좋거나 또는 장

래에 보다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동을 고려할 것이다.

기대되는 便益(benefit)과 費用(cost)의 비교에 따른 이동의사결정을 분석한 Sjaastad, Greenwood 등은 居住地를 이동함으로써 예상되는 所得과 費用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주된 결정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간의 임금 또는 소득격차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인구이동에 있어 相對的으로 점차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의 快適性의 차이나 또는 거주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의 租稅負擔과 그에 따른 혜택의 지역적 차이가 인구이동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거주지역에서의 조세부담과 그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이주결정의 요인이 된다는 티브假說(Tiebout hypothesis)이 한국의 경우에도 타당한 지를 검토하며, 지역간의 쾌적성의 차이를 산출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地域間 人口移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실증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多變量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 方法을 이용하여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 인구이동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II. 人口移動의 概念 및 測定方法

1. 人口移動의 概念

인간은 一生동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움직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일정한 정도의 物理的 距離개념이 내포되어 移動(mobility) 또는 移住(migration)라는 용어로 표시된다.

사람들은 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가? 人口移動, 즉 누가 어디로 이동하며, 그 이동의 動機나 原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분석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인구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概念을 지으며, 그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移動(movement)에 대하여 Isard는

長期(long-run), 中期(middle-run), 그리고 短期(short-run)의 이동으로 구분하고 있다.¹⁾ 여기서 장기적 이동이라 함은 平生에 걸친 移動(lifetime migration) 또는 몇 세대에 걸친 이동으로 흔히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박해 등에 의한 이동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는 인간사회의 제도적 갈등이나 歷史의 進行過程 속에서 이해되고 논의될 수 있는 非經濟的 要因에 의한 작용이 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한편 단기적 이동이란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출근 및 타지역에서의 일시적 출장, 계절적 요인 및 휴가철의 여행과 관광을 위한 一時的 移動 등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구정이나 추석과 같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관습에 따른 일시적 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이 또한 非經濟的 要因에 의한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동인구의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논의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中期的 移動 즉 평생기간보다는 짧은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지의 이동을 分析對象으로 한다. 또한 海外로의 거주지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국내에서의 거주지의 이동과는 특성을 달리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出發地(origin; 轉出地)로부터 目的地(destination; 轉入地)로의 永久的 내지 半永久的인 거주지의 변경으로 정의된다.²⁾ 이 정의에서는 지역간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며 이동행위는 어느 정도 臨時的인 것이 아니고 根本的이어야 된다는 개념도 내포된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특정 경계지역을 옮겨 거주함을 人口移動이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타지역에서 그 지역 안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轉入(in-migration)이라 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옮길 때는 轉出(out-migration)이라고 한다. 또한 주어진 지역 내의 轉入者數와 轉出者數의 차이를 純人口移動(net-migration)이라 한다. 이동인구를 현실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 입장에서는 일정한 移住期間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주기간이 설정되면 설정된 기간 이외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동은 이동인구로 측정되지 않음으로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면 過去의 이주와 現在의 이주가 혼합추정되어 일정기간에 있어 인구이동의 특징을 분석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歸還 移動人口가 이동인구의 측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반면

1) Isard (1975, pp. 172~181).

2) Lee (1966, pp. 282~297).

에 이동기간이 짧게 설정될수록 측정된 이동인구 중 一時的 혹은 非根本的으로 이주한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한편 지역을 구분함에 있어 同一地域 내에서의 주거지 변경은 인구이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지역을 너무 넓게 설정할수록 對象人口가 적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 측정을 위한 자료로서는 小規模 標本調査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에서 실시한 센서스의 자료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구분이나 기간의 설정은 분석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³⁾

2. 人口移動의 測定

본 항에서는 지역의 경계와 이주기간이 설정된 후 추계된 地域間 移動人口로부터 산출가능하고 빈번히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移動率에 관한 일반화된 표현을 소개하기로 한다.

전국이 n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하고 이주기간은 1980~1985년 사이의 5년간으로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이동인구를 기호 M_{ij} 로 표시하기로 하는데 우리가 移住期間을 5년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1985년 현재 5세 이상의 인구만을 對象人口로 한다. 따라서

$\sum_{j=1}^n M_{ij}$ = i 지역의 1980년 人口中 1985년 現在 生存하여 있는 人口

$\sum_{i=1}^n M_{ij}$ = j 지역의 1985년 現在 人口

$\sum_{j=i}^n M_{ij}$ = i 지역으로부터의 總轉出者 (total out-migrants)

$\sum_{i=j}^n M_{ij}$ = j 지역으로의 總轉入者 (total in-migrants)

가 각각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이동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단순한 總量的인 人口移動 현상보다는 純人口移動이 사회현상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人口移動의 總計 概念과 純計 概念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의 純人口移動(net-migrants)은

$$NM = M_{ij} - M_{ji} = -(M_{ji} - M_{ij})$$

로 정의된다. 물론 분석의 목적에 따라 總人口移動(gross migration)이나 확률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人口移動率(migration rate)을 사용하기도 하나, 본

3) 金大泳·李孝求 (1976, pp. 17~18).

논문에서는 이동인구를 측정함에 있어 純人口移動 概念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III. 人口移動의 決定要因 分析을 위한 理論的 模型

1. 微視的 人口移動 模型

人口變化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출생율과 사망율, 그리고 인구이동에 의하여 변화된다. 오늘날 많은 문명국에서 出生率은 점차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現代醫學의 발달로 사망율이 줄어들며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이므로 결국 각 국가나 지역의 출생율에서 死亡率을 뺀 自然人口增加率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인구의 변화는 지역간 인구이동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人口變動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정치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보다 많은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人口移動은 결국 국가나 지역 그리고 지방의 인구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에 있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이동은 농촌이나 도시 그리고 전국의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微視的 觀點에서의 분석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에 분석의 초점을 두어 타지역으로의 移住意思決定過程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경제적 측면 중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에 이와 연관시켜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주거지이동의 중요 결정요인 또는 반대로 住居地移動의 制約要因에 관한 논의는 자연히 經濟的 極大化, 이주의 動機, 거주자의 滿足度, 지역사회의 구성, 環境問題, 親姻戚의 구성, 그리고 가족의 移住戰略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개인이나 가족의 意思決定權者는 항상 合理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는 이동의 동기 논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개인에 있어 移住動機, 즉 人口移動은 이주함에 따른 예상되는 費用과 便益 그리고 滿足과 不滿足의 정도, 價值와 期待(value and expectancies)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시경제적 관점에서의 人口移動에 관한 이론의 출발점은 Hicks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시장의 필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즉, 新古典經濟學的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항상 均衡狀態에 있게 되며, 만약에 노동의 양시장에 있어 순경제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는 주로 임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이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最大化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인구의 이동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론적인 純粹競爭市場을 가정할 때, 정보가 완전하고, 이동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득은 개인의 選好函數의 유일한 변수가 된다. 즉 노동수요의 지역적 분포의 차이는 지역 임금격차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 인구이동은 지역간의 노동공급의 조정으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임금격차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노동수요의 지역적 분포변화는 지역간 雇傭率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未就業者들이 존재하는 한 인구이동은 모든 지역간의 실업율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일어난다. 따라서 新古典學派的 立場에서는, 지역간의 임금격차 또는 미취업자의 반응에 따른 인구이동은 일인당 소득의 지역간 격차를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므로 경제학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노동력의 이동문제를 그 주요 관심사로 삼아 온 것이다. 노동력의 地理的 移動은 경제활동인구의 이동이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미취학아동, 취학아동, 가사종사자, 노령자 등)의 이동까지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인구이동의 초점이 되어 왔다.⁶⁾ 따라서 왜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傳統的인 新古典學派的 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地域間的 實質賃金水準의 差異가 노동력의 이동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icks의 주장인 임금의 지역간 차이에 기인한 순경제적 이점 때문에 지역간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론에는 反論의 여지가 많다. 그것은 첫째로, 인구이동요인을 단순한 임금수준의 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뿐

4) Hicks (1932).

5) Mueller (1982, p. 8).

6) 石賢浩 (1986, p. 206).

만 아니라 도시의 快適性, 공공서비스 정도 및 사회적 이익 등 보다 포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個人的 屬性인 교육, 연령, 직업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경우에 經濟的 變數를 연령, 교육수준, 인종이나 기타 특수집단으로 구분, 분석하여 非經濟的 要因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 역시 危險한 結論을 내릴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微視的 觀點에서 인구이동을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移住 결정과정으로 살펴볼 때 인구이동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지역간 실질임금의 차이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人口移動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사회제도적 이유에 의한 強制的 移住가 아니라면, 개인 또는 가족이 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기본 이유는 현재 또는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향한 進行過程이라고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즉, 인구이동은 현재 또는 미래에 기대되는 效用水準을 極大化시켜 줄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과정이라 표현할 수 있다.

미시경제적 관점에서의 간단한 人口移動模型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한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i 라 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예정 지역인 목적지를 j 라 한다면 최소한 j 지역으로의 이동은

$$PV_{ij} = \sum \frac{U_j^t - U_i^t - C_{ij}^t}{(1+r)^t} > 0$$

이 充足될 때이다. 여기서

PV_{ij} = i 지역으로부터 j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른 純利得(net gain)의 現在價值

U_k^t = t 時點에서 k 지역의 期待效用($k=i$ 또는 j)

i = 出發地

j = 目的地

r = 割引率

T = 一生 중 예상되는 殘餘餘生

C_{ij}^t = t 時點에서 i 지역으로부터 j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른 費用

이 식은 인구이동 의사결정의 微視的 模型을 가장 一般化시킨 것이다. 여기서 $U_{i,j}$ 와 $C_{i,j}$ 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특정모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⁷⁾

그러면 현재 또는 미래의 효용수준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

7) DaVanzo (1981, pp. 92~94).

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Sjaastad,⁸⁾ Schultz,⁹⁾ Becker¹⁰⁾ 등은 인구이동을 人的資源의 개념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인구이동이란 일정한 人的資本을 축적한 사람이 자신의 生産能力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보다 알맞은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에 따른 비용도 移住에 의하여 더 높은 수익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人的資本投資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을 더욱 일반화시켜 볼 때 결국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移住 또는 인구이동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활의 질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지역을 주거지로 선택하게 된다. 인간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純利益의 現在價值(收入-移動費用)가 負가 아니고, 현재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용(C_{ij})측정에 있어 거리개념의 고려는 空間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교통비와 거리를 이주의 주요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 Vanderkamp은 네 가지 거리변수를 인구이동 개념에 도입하였다. 즉 이동하는 데 쓰여졌던 金錢의 費用(기회비용 포함), 이동에 따른 心理的 費用, 이주에 따른 社會的 階級隔差(원거주지와 이주지간의 심리적 만족도) 및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등이다. 따라서 개인이 바라는 미래기대수입 역시 다양하다.

Greenwood¹¹⁾는 인구이동과 이동거리와의 관계변수를 인구이동모형에서 다루었다. 이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동거리에 따라 不確實性이 증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개인이 얻은 總所得額을 거리에 따라 割引率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地域間的 勞動力의 移動 즉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微視經濟的 觀點에서 개별노동자 또는 가구의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인 모형으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즉 이주지의 동일 또는 유사업종간의 실질임금수준과 취업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경제변수로 나타낸다면 이주함에 따른 기대되는 實質所得의 差異(expected real income differentials)이다. 또한 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8) Sjaastad (1962, pp. 80~93).

9) Schultz (1962, pp. 51~58).

10) Becker (1976).

11) Greenwood (1970, pp. 375~384).

주합에 따른 예상되는 생활비용 및 이주시의 이주비용의 차이이다. 즉 이주함에 따른 예상되는 所得과 費用의 差異(expected differential real income and cost)로 설명할 수 있다.

單純化를 위하여 지역을 i 와 j 두 지역으로 구분하고, 개인은 i 지역에 거주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Y_i^t 는 t 기간에 있어 i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되는 貨幣所得이다. 한편 Y_j^t 는 t 기간에 있어 j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되는 貨幣所得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지역 i 와 j 에 거주함에 따른 예상되는 화폐소득의 차이의 할인된 현재가치를 D_{ij}^y 로 나타내기로서 하자. 이를 수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D_{ij}^y = \sum_{t=1}^T (Y_j^t - Y_i^t) (1+r)^{-t} \quad (1)$$

여기서 r 은 각 개인의 主觀的인 割引率이며 T 는 개인의 時間領域(time horizon), 즉 예상되는 殘餘生存期間이다.

한편, 각 개인은 각 지역의 生活費用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t 기간 동안 i 지역과 j 지역에 거주하므로써 예상되는 생활비용을 C_i^t 와 C_j^t 로 나타내면 개인의 예상되는 생활비 차이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_{ij}^c = \sum_{t=1}^T (C_j^t - C_i^t) (1+r)^{-t} \quad (2)$$

위 식에서는 지역간 생활비의 차이를 나타냄에 있어 재산세나 그 지역정부의 租稅負擔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앞의 (1)식과 (2)식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예상되는 생활비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 i 와 j 의 예상되는 실질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_{ij}^y = \sum_{t=1}^T (Y_j^t/C_j^t - Y_i^t/C_i^t) (1+r)^{-t} \quad (3)$$

(3)식에 i 지역으로부터 j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초래되는 기타 소득의 손실을 L_i^t 라 나타내고 또한 이주함에 따른 金錢的 또는 非金錢的 이주비용을 MC_{ij} 라 표기한다면 (3)식은 다음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_{ij}^y = \sum_{t=1}^T (Y_j^t/C_j^t - Y_i^t/C_i^t) (1+r)^{-t} - L_i^t - MC_{ij} \quad (4)$$

인구이동에 있어 앞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자 및 수익의 모형으로서의 노동력이동에 대한 설명에는 測定上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동에 따른 예상소득이나 생활비, 그리고 이동에 따른 貨幣的

費用的 測定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별 이동 당시의 임금수준 및 생활비의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소득이나 생활비의 추정은 地域別 平均値를 이용하게 되어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개인의 이주에 따른 심리적 비용의 추정이나 割引率(r) 및 殘餘生涯期間(T)의 크기 결정 등이 모두 이주자의 主觀的인 판단에 따른 값이기 때문에 모든 각 개인의 이동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본 논문 중 미시적 관점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이 모형의 非現實性 때문이라기보다는 微視的 접근이 갖는 限界, 즉 개인들의 이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巨視的 人口移動 模型

이제까지 우리는 인구이동에 있어 개인 및 가족단위의 微視的 接近方法을 중심으로 지역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타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潛在的 移住者는 이주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질소득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주지역의 여러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最終 移住意思決定을 내릴 것이다. 즉 그 지역의 총체적 또는 거시적 상황이 개인의 이동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巨視的 觀點에서 인구이동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우선 인구이동에 있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간의 相互關聯性 여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한 개인이 특정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는 데는 그 지역의 全般的인 賃金水準이나 失業率 등 巨視的 要因을 고려하여 이동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가, 있다면 이주 전보다 좋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가 커다란 결정요인이 된다.¹²⁾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巨視的 要因을 몇 가지 예로 든다면, 지역의 소득수준, 실업율, 물가수준, 지역환경, (지방)정부의 조세 및 지출정책 등이다. 이러한 거시적 요인들이 얼마만큼 총량적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들 요인이 개인의 이동결정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巨視的 變數들은 개인의 목적과 관련된 개념들에 의하여 규정되어질 수 있다. 예로서 한 개인이 이동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결정은 個人 또는 家計의 態

12) 尹錫範 (1977, pp. 47~63).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연령상태, 교육정도, 직업유형, 혼인여부, 가구의 규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個別的 要因들의 집합체는 개인에 대한 客觀的 特性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은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이주예정지역의 취업기회, 예상되는 소득, (지방)정부의 조세 및 지출정책, 기후와 주거지의 환경여건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Toney에 의하면 지역의 인구성장율은 그 지역의 經濟的 與件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지역경제의 성장율, 취업기회, 기후조건, 주변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微視的 觀點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이주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¹³⁾ 따라서 개인들이 이주함에 따른 예상되는 便益이 費用을 초과하여 특정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다 하여도 巨視的 觀點에서의 여러 정책들이 실제로 이러한 비용-편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개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巨視的 觀點에서의 요인들은 개인의 이주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량적인 인구이동에 영향을 준다. Freedman¹⁴⁾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구이동변수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의 특성을 합하여 총량적으로 나타내는 狀況變數들(contextual variables)이다. 예를 들어 평균 교육수준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교육수준으로부터 얻어진다. 둘째는, 環境變數들(setting variables)이다. 이는 개인의 특성을 합하여 총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特性들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예를 들어 歷史的, 文化的, 制度的, 外部的, 行態的인 요인으로 이들은 주로 정부의 效率의 國家經營能力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흔히 이용되는 構造的이며 巨視的 要因으로는 소득의 차이, 실업율, 교육, 도시화 정도, 산업구조의 변화, 기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지리적 차이 뿐만 아니라 社會的, 政治的, 經濟的 制度나 構造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도 한다.¹⁵⁾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인구센서스 자료와 연관하여 거시적 요인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 이주지와 관련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巨視的 要因들은 거주지의 특성이나 외부적 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개인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만족을

13) Toney (1978, pp. 205~212).

14) Freedman (1979).

15) Shaw (1975).

주는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지역보다 취업기회가 많아 높은 예상소득이 가능하더라든가, 주위 경관이나 기후조건이 좋더라든가, 교육 및 문화시설들이 우수하더라든가 하여 極大의 滿足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때 人口移動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지역의 租稅 및 支出政策이나 기타 정부의 정책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이론으로는 티브假說(Tiebout Hypothesis)¹⁷⁾을 들 수 있다. Tiebout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지역을 찾아서 이주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각 지역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租稅額과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惠澤, 즉 지방정부의 支出規模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서 임금수준, 고용기회 등뿐 아니라 기후조건 이외에 지방정부와 관련되어 快適度를 나타내는 주택, 위락 및 보건 시설 등에 의하여 인구이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된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여, 즉 快適性(amenity) 變數와 (지방)정부의 租稅 및 支出政策과 관련된 변수로, 구체적인 모형 속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자.

주거지 이동의 한 요소로 점차 중요시되는 것은 주거환경의 快適性이다. 한 개인이 i 지역에 거주하는 t 기간 동안 예상되는 快適性的의 가치를 AM_i^t 라 하고 또한 j 지역에 거주하는 t 기간 동안 예상되는 쾌적성의 가치를 AM_j^t 라고 한다면, 쾌적성의 地域間 差異의 할인된 현재가치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D_{ij}^a = \sum_{t=1}^T (AM_j^t - AM_i^t) (1+r)^{-t} \quad (5)$$

이 때 快適性에는 각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기후조건, 환경공해, 교통혼잡, 범죄발생 빈도, 문화시설 등 생활의 質的 問題를 반영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또한 개인이 지역 i 나 j 에 거주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예상되는 지방세 부담액을 T_i^t 와 T_j^t 로 나타내고 한편 지방정부로부터 공급받는 公共財 惠澤의 크기를 지역별로 E_i^t 와 E_j^t 로 나타내기로 하면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i 와 j 지역에 거주함에 따른 지방정부로부터의 조세부담과 수익을 現在價値로 나타내어 지역별 예상되는 차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Gardner (1981, pp. 67~69).

17) Tiebout (1956, pp. 416~424).

$$D_{ij}^g = \sum_{t=1}^T [(E_j^t - T_j^t) - (E_i^t - T_i^t)](1+r)^{-t} \quad (6)$$

앞의 (1)~(4)와 (5) 및 (6)의 결과를 종합하여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른 예상되는 實質便益의 總計를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 &= D_{ij}^y + D_{ij}^a + D_{ij}^g \\ &= \sum_{t=1}^T \{ (Y_j^t/C_j^t - Y_i^t/C_i^t) + (AM_j^t - AM_i^t) + E_j^t - E_i^t + T_i^t - T_j^t \} \\ &\quad (1+r)^{-t} - L_i^t - MC_{ij} \end{aligned} \quad (7)$$

(7)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partial D / \partial D_{ij}^y > 0, \quad \partial D / \partial D_{ij}^a > 0, \quad \partial D / \partial D_{ij}^g > 0 \quad (8)$$

을 예상하게 된다. 만약 (8)식이 개인에게 적용된다면 이주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즉 $D > 0$ 이면 $M_{ij} > 0$ 으로 이는 개인이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을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난 快適度變數나 정부의 租稅(T) 및 支出(E)의 變數는 巨視的인 變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7)식에서 제시된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 모형의 비현실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7)식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변수들, 예를 들어 지역간 生活費의 차이, 快適度の 차이, 이주함에 따른 金錢的 또는 非金錢的 移住費用, 각 개인의 主觀的인 割引率(r), 그리고 이주 후의 각 개인의 예상되는 殘餘生存期間(T) 등, 즉 개인들의 이동에 관한 장기에 걸친 일관성있는 신뢰할 만한 기록이나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논의되는 실증분석은 (7)식의 모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7)식의 취지를 최대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제변수들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實證分析을 하고자 한다.

IV.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에 關한 實證分析 :

韓國의 경우(1966~1985)를 中心으로

1. 韓國의 經濟 및 人口移動 概況

제IV절에서는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인구이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表 1〉 主要 經濟 및 社會 指標

區 分	年 度	1960 (1961)	1965 (1966)	1970	1975	1980	1985
GNP(1980不變, 10억원)			(4378)	17013	25816	36672	52705
GNP 成長率		(5.6)	(12.7)	7.6	6.8	-4.8	5.4
1人當GNP(經常價格: \$)		(82)	(125)	252	590	1589	2047
GNP對比產業別構成比(%)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次產業		35.2	38.1	28.0	24.9	16.3	14.5
2次產業		19.8	24.6	30.1	34.3	41.7	32.2
3次產業		45.0	37.3	41.9	40.8	42.2	53.3
產業生産指數(1980=100)		(6.6)	5.5	16.3	46.3	100.0	167.1
總人口(1000명)		24989	(29192)	31465	34706	37436	40448
增加率(%)		(3.0)	(2.55)	2.21	1.70	1.57	1.25
都市化率(%)		28.0	33.5	41.1	48.4	57.2	65.4
都市/農村 1人當 實質所得 比率(%)*		—	134.6	78.2	94.0	53.6	64.3
消費者物價指數(1980=100)		—	12.5	22.2	45.2	100.0	141.0
失業率(%)		—	7.4	4.5	4.1	5.2	4.0
住宅普及率(%)		—	81.3	77.8	74.4	71.2	69.7
道路鋪裝率(%)		—	5.8	9.6	22.3	33.2	49.9
國 道		—	14.7	28.5	50.8	71.6	76.4
地方道		—	2.5	4.4	14.7	23.5	40.5
上水道普及率(%)		—	—	33.2	43.1	54.6	67.2
電話普及率(人口100名當)		—	0.8	1.5	3.0	7.1	16.0
電氣消費量(1人當; KWH)		—	—	240	471	858	1234

資料: 1. 經濟企劃院, 『한국의 사회지표』, 1988; 『한국통계연감』, 각 년도; 『80, 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보고』.

2.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2, 1986, 1988.

註: *는 1980=100 기준 문팔용 교수의 추정치임, 조순·정창영의 8人,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7, 39쪽.

변화 속에서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제2항에서의 실증적 분석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항에서는 1960년부터 1985년 사이의 인구이동과 연관된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변화를 概括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사회구조의 기본적 변화를 보면 다음 〈表 1〉과 같다.

198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1961년~1985년 사이의 한국의 실질GNP 성장율은 8.14%이며, 同 기간의 연평균 인구성장율 2.0%를 제할 때 1인당 실질국

〈表 2〉 年平均 人口增加率

(單位: %)

年度 區分	60~66	66~70	70~75	75~80	80~85
全 國	2.57	1.90	1.96	1.51	1.45
都 市	5.58	7.03	5.19	4.88	4.71
農 村	1.24	-1.14	-0.66	-2.26	-2.53
都市化速度	3.01	5.13	3.23	3.37	2.83

資料: 1.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 調査報告』, 1960~1985.

2. 經濟企劃院 및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人口移動特別調査』, 1985.

민소득은 6.14%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人當 國民所得을 경상가격으로 살펴 보면 1961년에 82 US\$, 1970년에 252 US\$, 1980년에 1589 US\$, 그리고 1985년에는 2047 US\$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난 25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 되었다. 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공업부문은 연평균 약 11.9%의 高度成長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은 연평균 약 3.8%의 낮은 성장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에 대한 1차산업의 비중은 1960년의 35.2%에서 1985년에는 14.5%로 낮아진 반면, 2차산업은 19.8%에서 32.2%로 그리고 3차산업은 14.5%에서 53.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볼 때 社會 및 文化生活의 여건도 크게 向上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전화보급률, 그리고 1인당 전기소비량 등을 보면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국민소득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1960년 3.0%의 인구증가에서 1985년에는 1.25%의 증가율을 보여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경제의 量的 膨脹에 비하여 심각한 構造的 內部問題를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5년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매우 빠른 속도의 도시성장을 경험하였다. 인구 5만명 이상을 갖는 市地域만을 도시로 정의할 때 도시화율은 1960년에 28.0%에서 1970년에 41.1%, 1980년에 57.2% 그리고 1985년에는 65.4%이다.

經濟企劃院 및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공동으로 한 『1983 人口移動特別調査』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表 3〉 5年 동안의 人口移動率(5歲 以上)

(單位: %)

年度 區分	1966	1970	1975	1980	1985
總 移 動 率	12.1	16.2	17.4	23.2	21.4
道內移動率	6.2	7.1	8.1	11.8	14.2
道間移動率	5.9	9.1	9.3	11.4	7.2

資料: 1. 經濟企劃院 및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人口移動特別調查』, 1985, p. 39.

2. 經濟企劃院,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確定結果報告』.

첫째, 도시화의 속도가 농촌의 絶對人口를 감소시킬 정도로 매우 빨랐다. 즉 도시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5% 이상으로 전국 인구성장율의 2~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빠른 시기는 1966~1970년간으로 연평균 7.0%나 되었으며, 그 후 다소 增加率이 鈍化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둘째, 都市人口增加의 構成要因을 보면 인구이동에 의한 流入人口의 增加이다. 특히 인구이동의 흐름에 있어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흐름이 大宗을 이루고 있는 현상이다. 경제기획원에서 집계한 센서스에 의하면 이동율이 漸增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매 5년마다 실시해 온 센서스에서 지난 5년간에 구·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常住地를 옮긴 사람을 이주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地域別 總常住人口에 대한 백분율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 이동율은 1966년에 12.1%에서 1970년에 16.2%, 1980년에 23.2% 그리고 1985년에는 21.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移動率의 增加率이 가장 큰 기간은 1975~1980년간이나 그 후 1980~1985년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 연도에서 道內移動率과 道間移動率이 1980년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985년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道間の 이동은 급격히 줄어든 대신에 도내에서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도시인구가 급성장한 것은 특히 몇몇 대도시의 人口集中現象이 주원인이며 그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비대화 현상이 큰 인구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5대 도시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는 1960년에 20%에서 1980년에는 그 2배인 39.9%, 그리고 1985년에는 43.2%에 이르렀으며, 특히 수도인 서울의 인구구성비는 1960년의 9.8%에서 1980년에는 22.3% 그리고 1985년에는 23.8%에 이르고 있다.

〈表 4〉 首都圈 人口集中 現況

(單位: 千名, %)

年度 區分	1960	1970	1980	1985
서울	2445 (9.8)	5536 (17.6)	8364 (22.3)	9626 (23.8)
京畿道	2749 (11.0)	3358 (10.7)	4934 (13.2)	4793 (11.9)
首都圈	5194 (20.8)	8894 (26.3)	13298 (35.5)	14419 (35.7)

資料: 1. 經濟企劃院 및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人口移動特別調査』, 1985, p. 41.

2. 經濟企劃院, 『1985년 人口 및 住宅센서스 確定結果報告』.

서울시의 인구증가율은 70년대 전반기에는 연간 4.4%에서 70년대 후반기에는 3.9%로 감소한 데 비해, 周邊衛星都市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심한 도시는 12.6%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70~1975년간에는 우리나라 總人口增加의 62.8%를 서울과 경기도가 흡수하였으나, 1975~1980년간에는 그 비율이 86.8%로 증대되어, 수도권 전체로 본 인구집중비율은 1960년 20.8%에서 1980년에는 35.5%로 증대되고 있어서 수도권 인구집중이 70년대 후반에 와서 더욱 加速化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¹⁸⁾ 1985년부터는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大都市로의 人口集中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급속한 경제발전 및 실질국민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住宅普及率이 1965년 81.3%에서 1980년에는 71.6% 그리고 1985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69.7%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많은 문제의 발생은 經濟的 觀點에서 본다면 지극히 正常的이고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 예를 든다면 〈表 1〉에 나타난 도시-농촌의 일인당 실질소득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低米價政策으로 도시-농촌간의 所得隔差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의 2/3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도시의 조사대상가구를 俸給者나 勤勞者家口에 한정하지 않고 企業主 등 資産 및 資本所得取得者 家計를 포함한 모든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가구와 농촌의 현재 표본가구를 비교한다면 도시-농촌간의 소득불균형의 심화현상은 더

18) 經濟企劃院 및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人口移動特別調査』, pp. 32~42.

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¹⁹⁾ 이처럼 經濟的 要因의 대표인 소득의 도시-농촌간의 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혜택, 문화혜택, 자본의 도시로의 집중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社會現象인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여러 요인들이 어느 정도 人口移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2. 韓國의 人口移動 決定要因

1) 模型 設定 및 資料(Data)의 處理

본 項에서는 앞서 논의된 理論的 論議 및 模型을 토대로 1966년부터 1985년 사이에 실시된 한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자료에 조사된 인구이동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實證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동인구를 현실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 입장에서는 일정한 移住期間을 설정하고 있다. 특정한 이주기간이 설정되면 조사기간 이외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동은 인구이동으로 측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면 과거의 이주와 현재의 이주가 혼합 측정되어 인구이동의 時限的 特徵을 분석,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歸還移動人口가 이동인구의 측정에서 漏落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반면에 移住期間이 짧게 설정될수록 측정된 移動人口 중 일시적으로 이동한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또한 지역 설정에 있어 지역의 경계가 구분되면 동일지역 내에서의 住居地 變更은 인구이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지역을 너무 넓게 설정할수록 對象人口가 적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人口移動 測定을 위한 자료로서는 소규모 표본조사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구분이나 기간의 설정은 分析目的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에서 실시한 센서스 자료가 이용되고 있다.²⁰⁾ 본 연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 정부의 『人口 및 住宅 센서스 報告』 자료에 나타난 시·도 지역구분 및 이동인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人口移動 決定要因이나 특성은 연령별, 남녀성별, 교육수준별 등 인구이동의 選別性을 중심으로 이미 잘 밝혀져 있어 이러한 선별성을 중심으로

19) 趙淳・鄭暢泳・文八龍 外 7人 (1987, pp. 39~40).

20) 金大泳・李孝求 (1976, p. 18).

한 새로운 연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 각 지역의 豫想所得(임금수준), 雇傭機會 등을 나타내는 經濟的 要因과, ii) 각 지역의 삶의 질을 표시하는 快適度의 차이를 나타내는 非經濟的 要因, iii) 각 지역의 租稅負擔과 政府支出規模, 즉 (지방)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나타내는 政策的 要因, 그리고 iv) 기타 教育機會 및 住宅事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들이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回歸分析方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모형은 이미 앞에서 논의된 理論的 模型을 바탕으로 하여 數量的 測定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한 회귀분석모형에 맞게 변수들을 선택하여 변화시켰다. 이러한 回歸分析方法에 의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미 Schultz나 Sjaastad의 이론을 많은 경제학자들²¹⁾이 검증이 가능한 分析모델로 발전시켜 경험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基本模型을 만들어 실질 분석에 적용하였다.

즉,

$$NM_i = f(RWA_i, MWA_i, JOB_i, AM_i, TTAX_i, LTAX_i, TEXP_i, WEXP_i, ED_i, HOUS_i, e_i).$$

여기서

NM_i = 66~70년, 70~75년, 그리고 80~85년 사이의 i 都市의 純移動
人口數

RWA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賃金隔差 指數

MWA_i = 85년도 i 都市의 年平均 實質賃金

JOB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就業機會

AM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삶의 質을 나타내는 快適度 指數(amenity index)

$TTAX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1인당 總租稅 負擔額

$LTAX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1인당 地方稅 負擔額

$TEXP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1인당 政府總支出額

$WEXP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1인당 福祉, 厚生 支出額

ED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教育機會

$HOUS_i$ = 70년, 75년, 및 85년도 i 都市의 住宅普及率

21) Greenwood (1969, 1971); Lowry (1966); Sahota (1968).

e_i =誤差

이러한 식을 추정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각 지역의 이동인구자료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와, 각 지역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만드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동인구를 측정함에 있어 한 지역의 轉入者數에서 轉出者數를 차감한 純計基準(net basis)²²⁾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귀분석의 표본수가 總計基準(gross basis)에 의하여 M_{ij} 와 M_{ji} 를 각각 표본으로 보는 경우에 비하여 표본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계기준으로 지역간 인구이동의 總量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해외이주를 제외하면, 한 국가 내에서의 轉入-轉出에 의한 純人口移動(net migration)은 零이 된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전 지역의 인구이동을 동시에 한 시점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꼭 동시에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왜, 어떤 이유로 특정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純移動人口가 많은가 또는 적은가를 밝히는 데 있다. 한국의 인구 및 센서스 자료에서는 4개 特別市와 9개 道別 中心으로 이동인구수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이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농촌·도시 지역으로의 구분과 4개 特別市와 9개 道를 중심으로 한 1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구분은 자료의 제약상 不可避한 것으로 인정되나, 도별 및 대도시 중심의 인구이동 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標本數(sample size)가 작아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간 인구이동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우기 66~70년간, 70~75년간, 그리고 80~85년간의 각 도시의 純移動人口를 측정함에 있어 매년마다의 변동을 센서스 자료로서는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연도간의 人口數의 차이는 동기간의 자연인구증가, 歸還人口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의 정확한 순인구이동의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인구통계는 조사 및 통계기법의 발전에 따라 그 信賴性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이동인구의 통계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더우기 매년 戶籍申告를 기준으로 한 『人口動態統計年報』 또는 住民登錄에 의한 집계로 나타나는 『人口移動統計年報』의 자료는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도시의 세부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르

22) Haurin, D.R. and R.J. Haurin (1988, pp. 239~254).

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도시의 순이동인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기간의 純移動人口를 推定하여 사용하였다. 즉, 1966년, 1970년 및 1980년의 각 도시인구수를 기준인구로 간주하고 이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1970년, 1975년 그리고 1985년도의 각 도시인구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인구수는 모든 여건이 기준년도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 4~5년 후의 假想的 인구수이다. 이렇게 推定된 인구수를 1970년, 1975년 및 1985년의 실제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인구수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각 도시의 4~5년간의 純移動人口(NM_t)로 간주하였으며 그 추정 결과는 <附表 1>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파악된 각 도시의 순이동인구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間接的 方法에 의한 각 지역(市)의 純移動人口의 추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농촌과 도시에, 그리고 각 지역(市)의 자연인구증가율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地域別(시별) 순이동이동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며, 있다 하여도 그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人口統計資料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표되는 住民登錄에 의해 집계되는 『人口移動統計年報』에 나타난 각 도시의 순이동인구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주는 하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른 住民登錄上의 移動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도 그 크기나 이동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누락이나 주민등록표의 이전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住民登錄表에 의해 집계되는 移動人口統計資料는 인구가동의 일반적인 양적 변화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도시의 純移動人口 數字는 그 신뢰성이 매우 의심되므로 본 연구에 있어 순이동인구 자료로의 이용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라 間接的인 방법으로 純移動人口를 推定하여 사용하였다.

각 도시의 순이동인구를 추정함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각 도시인구의 自然成長率이 다르다는 점이다. 각 도시인구의 자연성장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각 도시의 出生率이나 死亡率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인구센서스 조사시점을 기준

으로 5년 전에 출생한 嬰兒의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동함이 없이 계속 한 지역 안에 거주한다는 또 다른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도시의 死亡率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 또는 1~2년 전에 한 지역으로 이주 오거나, 他地域으로 이동하여 사망하는 경우 각 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이유에 따른 사망율의 차이가 각 도시의 純移動人口數를 파악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오늘날, 특히 研究對象期間인 1966~1985년에 있어 교육, 교통, 통신 및 일반 의료시설의 확대 등으로 농촌이나 도시의 出產力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1985년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대 및 30대의 出產可能한 女性人口가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어 오히려 대도시의 자연 인구성장율이 다소 높은 현상이다. 따라서 각 지역(市)의 기준연도 상주인구에다 전국의 연평균 자연인구증가율을 적용하여 비교연도의 각 지역의 자연인구증가에 의한 인구수를 추정하고 이것을 실제 조사된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각 지역(市)의 常存人口와 비교하여 각 지역(市)의 純移動人口로 추정하는 것이 그렇게 非合理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정확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인 각 지역(市)의 人口移動 趨勢를 파악하는 데에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198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전 도시인 61개 市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분석기간을 1966년까지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行政區域의 변경에 의하여 각 지역(市)의 인구수의 추정이 어렵거나, 또한 각 지역(市)의 임금 및 소득, 물가수준의 선정, 고용기회에 관한 통계자료 및 快適性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 그리고 각 地方政府(市政府)의 租稅 및 歲出 規模의 파악 등이 어렵거나 일관성 있는 자료를 얻기가 힘든 지역(市)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하여 61개 都市 중 24개 都市가 선정되었다.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수원, 전주, 청주, 포항, 군산, 여수, 천안, 춘천, 의정부, 원주, 강릉, 경주, 순천, 진해, 안동, 충주 등 제주도를 제외한 24개 도시로 각 지역 또는 각 도별의 代表性도 충분히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구이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독립변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經濟的 要因을 나타내는 변수로 각 지역(市)의 所得隔差指數

(RWA_i) 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각 지역(시)의 實質賃金(MWA_i)과 각 지역의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낸 就業機會(JOB_i) 變數를 고려하였다. 여기서 각 도시의 賃金隔差指數(RWA_i)는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서울=100을 기준으로 한 각 시·도의 지수를 해당 市의 賃金指數로 사용하였다. 또한 1985년의 경우에는 RWA_i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광공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연평균 소득에 1980=100의 각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추정된 年平均 實質所得(MWA_i)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준으로 66년, 70년 및 75년의 各 都市別 實質所得(MWA)을 추정할 수가 없어 70년 및 75년도에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한편 각 도시의 就業機會(JOB_i)는 해당 연도의 각 도시의 전산업 근로자수를 해당 연도의 각 도시의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고 이에 100을 곱하여 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각 도시의 就業難易度로 간주하였다. 이에 관한 추정자료는 <附表 2>에 수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雇傭率은 인구이동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취업기회는 실현된 雇傭率을 사용하는 대신에 고용에 대한 期待值를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回歸分析에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이론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각 도시에 대하여 就業機會에 대한 기대치를 추정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석자의 自意性에 따른 통계자료의 왜곡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就業難易度 指數는 취업대상자에게는 어느 정도 각 지역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값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실제 통계자료상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서울의 경우 失業率이 어느 대도시보다도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시·도별 고용통계조사 결과 1990년 3·4 분기의 실업자의 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잘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大都市로의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就業機會가 인구이동의 절대적 決定要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는, 非經濟的 要因을 나타내는 快適度指數(amenity index)를 고려하였다. 쾌적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氣候條件이며, 따라서 미국과 같이 국토가 광활한 경우 기후조건과 인구이동 사이에는 상당한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²³⁾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토가 狹小하고 지역간 기후의 편차가 심하지 않으므로 기후조건 때문에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조건 이외의 각 지역(시)의 快適度 差異를 나타내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快適度指數를 구하였다. 즉, 각 지역(市)의 i)道路鋪裝率, ii)上水道普及率, iii)下水道普及率, iv)쓰레기 收去率, v)住宅普及率, vi)醫療施設의 量적 차이; 조사대상 지역의 總 病院數 대비 각 都市의 病院數 比率, vii)醫療惠澤의 質적 차이; 각 도시별 인구 1만에 대한 간호원, 한의사 포함한 醫療業者數, 또한 각 지역의 viii)유아원, 양로원 및 부랑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 시설 등 受容能力 總數 대비 각 都市의 受容能力 비율, ix)都市公園 總면적 대비 각 都市公園 面적 비율, 그리고 x) 각 지역(市)의 安全度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별 소방소·경찰서 및 파출소의 총 공무원수 대비 각도시의 공무원수 비율 등을 합산하여 각 도시의 快適度指數로 간주하였다. 이에 관한 산출 근거 및 추정된 도시별 快適度指數는 <附表 3>, <附表 4>, <附表 5>에 수록되어 있다.

1970년의 경우는 일관된 자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71년 자료를 이용하여 1970년 지수로 간주하여 1975년 및 1985년과 비교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지수(index)는 각 지역(시)의 삶의 質의 相對的 差異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71년의 서울의 快適度指數가 537.7임에 비하여 부산 424.2, 광주 344.7, 대전 259.6, 포항 256.8, 군산 371.1, 천안 212.1, 강릉 229.6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그리고 大都市와 小規模 都市와의 생활의 質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85년의 경우 서울의 추정된 快適度指數는 626.8에 비하여 부산은 478.9, 광주 413.6, 대전 397.4, 포항 392.7, 군산 360.9, 천안 360.4, 강릉 397.4로 나타나고 있어(<附錄>참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간의 쾌적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1985년도의 경우 서울을 100으로 볼 때 대부분의 도시가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농어촌과의 비교를 예상한다면 대도시 또는 도시로의 人口移動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도시의 추정된 快適度指數의 算出方法은 精巧하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쾌적도지수 항목에 각 도시의 犯罪發生率, 交通混雜, 環境公害 등은 추가

23) Cushing (1987, pp. 641~649).

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범죄발생율의 경우에는 각 도시의 경찰서 및 파출소의 공무원 비율을 포함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大都市의 교통혼잡이나 환경공해문제는 연구대상기간 이후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항목을 고려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分析對象으로 하고 있는 각 도시에 대한 교통혼잡의 정도나 환경공해에 대한 信賴性있는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에 制約性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본 연구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1966~70년, 70~75년, 80~85년 기간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과 경제발전에 따라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분석 하는데 있음으로 共通的으로 비교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즉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각 도시의 교통혼잡이나 환경공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快適度指數를 추정하는 데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지역의 交通混雜과 環境公害問題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대도시 생활의 편리성이나, 문화생활에 따른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생활의 快適性의 程度가 대도시의 교통혼잡이나 환경공해보다 이주자에게 더 큰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각 도시에 대한 複적도지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각 항목의 지수를 單純合計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통한 각 항목의 加重平均(weighted average)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분석자의 자의적인 통계조작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치의 적용문제에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도시의 快適度指數를 추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研究課題로 남긴다.

셋째로, 政策的 要因으로 볼 수 있는 각 지역(시)의 1人當 總租稅負擔($TTAX_i$) 또는 地方稅負擔($LTAX_i$)과(〈附表 6〉 참조) 각 지역(시)의 1인당 總歲出($TEXP_i$) 및 厚生·福祉 지출($WEXP_i$)변수(〈附表 7〉 참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외의 중요 변수로는 각 지역(시)의 초·중·고·전

문대학·대학의 수를 이용한 相對的 教育의 機會(ED_i)와, 快適度指數와 분리하여 住宅事情($HOUS_i$) 등(〈附表 8〉 참조)을 도시인구이동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2) 分析結果 比較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하여 체계적이며 좋은 연구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金大泳·李孝求의 연구, 金善雄·R. Repetto²⁴⁾의 연구, 韓國人口保健院의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²⁵⁾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崔仁鉉, 卞裕榮, 尹鍾周 그리고 具成烈의 연구, 또한 同研究院의 『韓國의 死亡水準 및 人口移動 趨勢』²⁶⁾라는 연구보고서, 그리고 成潯根²⁷⁾의 『韓國의 農村과 都市 地域間 人口移動』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80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道와 道 사이 또는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문제, 그리고 選別性에 따른 연령별, 계층별, 성별, 교육수준별 등 여러 측면에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론을 일부 소개하면, 인구이동에 있어 年齡的 選擇度가 매우 강하여 최초의 이동경험이 15~24세 연령집단에서 集中的으로 일어나며, 여자가 남자보다 이동성이 강하고, 未婚狀態에서 이동성이 강하며,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이동성향이 높고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회적 부적응도나 心理的 離脫感을 덜 겪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尹鍾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동자의 이동이유는 家族要因이 38.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이 37.3%와 教育要因이 18.6%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성별로 보면 男子에 있어서는 經濟的 要因이 52.1%로 가장 많은 반면 여자는 가족요인이 58.8%로 가장 많아 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이동이유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별 이동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 家族要因이 45.2%와 教育要因이 25.8%로 주된 이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經濟的 要因이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移住地 選擇理由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40.0%)과 家族要因(41.9%)이 이동이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지 선택을 이동자의 거주지와 관련해 보면 市部지역으로의 이주는 經濟的 要因이 支配的인데 비하여 郡部지

24) 金善雄·R. Repetto 外 (1983).

25) 崔仁鉉·鄭榮一·卞裕榮 (1986).

26) 崔仁鉉·鄭榮一·卞裕榮 (1984).

27) 成潯根 (1988).

역 이주는 보다 家族的인 要因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동시 單獨移動의 행위를 일으킨 者는 全體移動者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단독 이주자의 대부분(70%)이 20대 초반의 젊은 未婚 年齡層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주 직후 再移住에 대한 의사는 이동자의 48.3%가 가져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70%, 다시 말해 전체 이동자의 1/3은 새로운 주거이동을 결심하고 있고 再移住 이유는 주로 경제적 요인(30.9%)과 교육 등 環境要因(24.0%)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²⁸⁾

한편 具成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계층에 따른 인구이동행태에 있어 30세 미만의 인구만이 소득요인에 대하여 有意的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은 인구비중 '重力'과 거리에 대해서도 극히 有意的인 반응을 보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동율도 높지만 學歷이 높다고 하여 소득, 重力, 거리 등에 대하여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30세 이상 인구의 이동행태는 대체로 所得要因에 대하여 유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30세 이상 低學歷 男子 人口로서 이들의 인구이동율은 어떤 요인에 대하여도 유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²⁹⁾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서 발간한 崔仁鉉·鄭榮一·卞俗榮의 『韓國의 死亡水準 및 人口移動趨勢』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農村과 都市의 人口移動에 있어 한국의 경우 전체 이주에 대한 농촌→도시의 이주가 가지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과 도시간의 이동이 증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지역을 떠나는 移住者들은 도시지역의 이주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및 기술수준, 도시 노동시장 및 고용기회의 情報접촉의 制限 등으로 대체로 도시사람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도시직업을 얻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都市에서 農村으로의 이주자와 農村에서 都市로의 이주자의 특성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非農業職種에서 農業職種으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산업의 확대나 새로운 사무에 따른 轉勤 등의 이유로 단지 주거지만 바꾸고 있다. 반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들은 대부분 농업직종에서 비농업직종으로 그들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거주자로서 永久히 移住하는 경향이 있다.

28) 尹鍾周 (1986, pp. 92~196).

29) 具成烈 (1986, pp. 197~244).

더우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들로서 最低의 수입을 가지며 이들의 수입은 다른 도시직업의 수입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촌→도시 이주자들이 도시의 低所得 職種에 취업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나, 농촌→도시 이주자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며, 移住者들은 도시의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농촌→도시 이주자들은 一日 또는 臨時勞動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失業問題 그 자체보다는 도시 고용에 있어서 보수가 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하고, 固定的인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年齡階層別로 여자는 15~24세에 이동이 집중되며 남자는 25~34세에 집중되고 있어 選擇性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移動傾向 때문에 도시인구의 연령은 젊어지는 반면에 농촌인구는 노동력에 있어서 老齡化 傾向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5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80~85년 사이의 인구이동은 25~29세 연령층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전체 이동인구 중 20대가 34.7%를 점하고 있고 특히 女子가 男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이러한 이들의 분석과 비교하기 위하여 앞 2절 1항에서 설명된 모형을 <附錄>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回歸分析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발췌하여 보인 것이 <表 5>와 <表 6>에 요약되어 있다.

<表 5>에 나타난 單純回歸分析의 의도는 1966~70년, 70~75년, 그리고 80~85년 사이의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들이 어떠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물론 <表 5>에 나타난 단순회귀의 결과만으로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에는 그 正確도가 크게 손상될 여지가 있다. 즉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다른 요인을 제어함이 없이 純移動人口를 어떤 한 요인에 대해서만 回歸시키게 되면 그 회귀계수의 正確도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가 <表 6>이다. 중회귀분석의 경우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는 時系列資料(time series data)를 기초로 하기 보

30) 經濟企劃院, 『1985年 人口 및 住宅 센서스 確定結果報告』, 1987.

〈表 5〉 純移動人口(NM)과의 單純回歸分析 結果

模型 說明變數	NM70	NM85	NM85	NM85	NM75	NM75	NM85
Constant	-8,811,742 (-2.29)	17,444 (0.15)	2,873 (0.46)	-762,686 (-5.8)	-26,442 (-2.72)	-229,705 (-3.5)	-664,407 (-0.69)
RWA70	11,819.1 (2.58)	—	—	—	—	—	—
MWA85	—	0.025 (0.66)	—	—	—	—	—
JOB85	—	—	1,603.4 (1.07)	—	—	—	—
AM85	—	—	—	2,102 (6.59)	—	—	—
ED75	—	—	—	—	1,344.1 (21.1)	—	—
LTAX75	—	—	—	—	—	69.8 (5.17)	—
WEXP85	—	—	—	—	—	—	1.85 (1.73)
R ²	0.23	0.02	0.049	0.66	0.95	0.54	0.12

註: () 안은 t값.

다는 橫斷面資料(cross section data)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困難性을 회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表 6〉의 Durbin-Watson 통계량이 보이듯이 추정결과를 훼손시킬 만큼 自己相關(autocorrelation)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도시간의 實質賃金の 隔差(實質所得의 隔差)와 각 지역의 就業機會의 차이가 1966~70년, 1970~75년, 그리고 1980~85년 조사대상 全期間에 있어 한국의 인구이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지역간의 취업기회 및 실질임금(소득)의 차이가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즉 경제가 발전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간의 賃金の 차이나 就業機會의 차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影響力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전면 부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석의 목적에 따라 그 분석에 사용되는 基礎 統計資料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이미 분석한 대상은 주로 농촌과

〈表 6〉 純人口移動(NM)과의 重回歸分析 結果

模型 說明變數	NM70	NM70	NM75	NM85	NM85
<i>Constant</i>	-1,248,487 (-3.62)	-173,661 (-1.49)	-122,070 (-1.57)	-577,193 (-3.43)	30,116 (-0.57)
<i>RWA</i>	5,324.6 (1.45)	1,314.8 (0.89)	322.7 (0.27)	— —	— —
<i>MWA</i>	— —	— —	— —	-0.0413 (-1.21)	-0.0213 (0.86)
<i>JOB</i>	990.57 (0.66)	525.2 (0.83)	1,324.6 (2.60)	-419.9 (-0.34)	-15.6 (-0.02)
<i>LTAX</i>	144.37 (1.54)	-35.01 (0.79)	3.375 (0.54)	7.869 (2.41)	3.885 (1.65)
<i>WEXP</i>	31.029 (0.09)	4.14 (0.22)	9.738 (1.19)	-1.403 (-1.40)	-1.254 (-1.25)
<i>AM</i>	2,108.7 (3.31)	— —	-100.7 (-0.41)	1510.1 (3.68)	— —
<i>ED</i>	— —	2,425.9 (12.0)	1,310.8 (10.0)	— —	555.10 (6.57)
D.W.	2.30	1.27	1.89	2.53	2.32
R ²	0.75	0.95	0.97	0.80	0.89

註: ()안은 t값.

D.W.는 Durbin-Watson 통계량.

도시의 所得隔差에 관한 연구인데 비하여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도시와 도시 사이의 所得隔差와 就業機會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소개한 具成烈의 연구결과, 즉 인구이동에 있어 30세 이상의 인구는 대체로 소득요인에 대하여 유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한편, 최인현·정영일·변용찬의 연구결과, 즉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이주자들은 일일 또는 臨時勞動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써 失業問題 그 자체보다는 도시고용에 있어서 보수가 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하고, 고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와 도시 사이의 所得의 隔差나 就業機會의 차이는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0년대나 1970년대의 인구이동은 주로 농촌과 도시 사이의 임금 및 취업기회의 차이 때문에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人口移動보다는 都市와 都市 사

이의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구센서스 결과와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해 1980년대에 들어와서 人口移動의 주된 原因이 다른 데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表 6〉에서 보이고 있는 좌측열의 說明變數 연도는 被說明變數의 연도와 일치한다. 한국의 경우 1966~70년에 비하여 1970~75년 그리고 80~85년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地域間 就業機會의 차이가 인구이동에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表 6〉 참조)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현상이다. 오늘날 농촌에서 農繁期뿐 아니라 평시에도 높은 품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은 추정된 결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韓國經濟構造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持續的으로 성장·발전하는 韓國經濟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각 분야와 각 지역에서 노동력의 不足現象이 나타남으로 지역간의 賃金隔差나 雇傭機會의 격차가 크게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각 도시의 임금격차나 就業機會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티브假說의 배경이다. Tiebout의 주장은 사람들이 조세부담이 적고(지방)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을 찾아 이주한다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그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³¹⁾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表 5〉와 그리고 〈表 6〉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外觀上으로는 Tiebout의 가설을 지지하는 듯 하나 면밀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각 도시의 1인당 總地方稅負擔(LTAX),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출에 따른 혜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1인당 각 도시의 總社會厚生福祉支出(WEXP)은 인구이동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從屬變數(여기서는 순인구이동: NM)와 獨立變數(여기서는 LTAX와 WEXP)간의 相關係數(R)가 ± 0.60 이상이면 그들간의 상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R^2)는 平均的으로 독립변수가 얼마나 잘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수들이 반드시 상관의 정도를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며 가설에 대한 檢定과 因果關係의 정도를 제시하여 주는데 불과한 것이다. 각 도시의 1인당 총지방세부담(LTAX)과 각 도시의 1인당 총후생복지지출(WEXP) 즉

31) Yoo (1987).

지역정부로부터의 공공혜택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回歸係數(regression coefficient)의 부호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表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6~70년의 관계를 나타내는 *NM70*과 *LTAX*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LTAX*의 부호가 正(+)으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지역인 24개 시 중에서 5개 시만이 인구이동에 의하여 絶對人口가 줄어들고 나머지 19개의 시에서 인구이동에 의하여 人口增加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억지로 해석한다면 각 지역의 1인당 조세부담이 클수록 이동에 의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WEXP*의 부호가 負(-)로 나타난 것은 地方政府의 혜택이 클수록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政策變數인 *LTAX*와 *WEXP*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최소한 한국의 경우에는 각 도시의 租稅負擔이나 정부로부터의 公共惠澤이 인구이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단순한 勞動力만의 이동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새로이 이주한 지역에서 經濟活動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財産 또는 資本의 移動을 수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도시일수록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오히려 점차 租稅賦課의 源泉이 증가하게 되어 조세수입이 커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세출의 증가인 공공혜택의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도시에 인구가 集中함에 따라 이에 부족한 공공재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각 地方政府의 歲出規模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公共財 확대가 각 지역의 人口流入의 決定要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대도시의 人口集中을 抑制하며 人口分散을 위하여 도시 중심지역에 살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政府組織 및 財政構造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부 및 재정구조는 많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지방분권적 정치 및 재정구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한국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활성화된다면 Tiebout가설이 유의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1960~70년, 1970~75년 및 1980~85년의 연구대상 全期間에 걸쳐서

한국 인구이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각 도시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快適度의 차이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에 있어 인구의 이동은 각 지역의 賃金 및 所得, 그리고 雇傭機會 등 經濟的 要因의 차이나 租稅負擔의 차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非經濟的 要因에 의한 것이다.

앞서 소개된 윤종주의 연구 결과에서 이주지역의 선택 이유 중에서 結婚 및 家族的 要因이 41.9%가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非家族的 要因으로는 각 도시의 쾌적성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중요 결정요인(<表 5>, <表 6> 참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즉 상하수도시설부터 시작하여 醫療惠澤이 수월하고, 경찰·소방시설 등에 의한 안전성이 높은 지역, 공원 등 慰樂施設과 문화시설이 많고 주택사정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1966~70년, 1970~75년 및 1980~85년의 전 조사대상 기간에 걸쳐서 가족적 요인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인구이동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教育機會(ED)의 都市間의 隔差 때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간의 教育의 質的 差異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의 기준문제로 도시간의 교육의 질적 차이는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 만약 도시간의 교육기회의 量的 차이 뿐만 아니라 質的 차이를 함께 고려 한다면 한국에서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教育機會의 差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教育을 중요시하는 우리사회의 현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조사대상 전 기간인 1966~85년에 있어서 한국의 人口移動의 決定要因은 家族的 要因을 제외한다면 도시간의 教育機會(ED)의 차이가 가장 큰 결정요인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文化施設이나 住居環境이 좋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즉 도시간 快適性의 차이가 인구이동의 중요 決定要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최근 國土開發研究院의 조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소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1989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落後地域인 전라남도 진도·함평군과, 전라북도 진안·순창군, 경상북도 봉화·청송군 등 6개 군 지역주민 2492명을 대상으로 個人面接 및 集團面接 設問方法으로 각 지역주민의 所得意識構造調

査를 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주민의 64%는 언젠가 도시로 이사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주 이유는 子女 教育問題 때문이 45.9%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이 便利한 生活을 하기 위해서가 31.2%인 반면, 돈을 벌기 위하여는 11.7%, 職業을 바꾸기 위하여는 5.9%, 기타 5.2%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조사된 낙후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뒤떨어진 부문으로는 教育·文化施設을 36.2%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雇傭·産業施設로 3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이러한 실제 면접설문조사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논문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 전제한 것과 일치한다. 즉 經濟學的 觀點에서 人口移動 現象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 및 제약조건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人口移動이란 個人 또는 家族 集團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效用極大化를 追求하는 과정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여러 문제의 발생, 예를 들어 住宅不足問題나 交通混雜, 水質 및 環境汚染 問題 등의 발생과 확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大都市가 인구과밀로 혼잡하다고 하여도 農村보다는 中·小都市, 그리고 中·小都市보다는 大都市에 거주함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거주자나 대도시로의 이주자에게 住民稅나 財産稅의 重課稅를 한다거나,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혼잡으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조세를 통한 방법(과중한 조세부과)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效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인구분산을 위한 방법은 農漁村 및 地方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많은 中·小規模의 공장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주민들이 거주지의 변경없이 취업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자녀들이 良質의 敎育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地方敎育(施設)에 과감한 投資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는 대도시의 투자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대신에, 낙후된 지역일수록 醫療惠澤, 文化施設 등 地域住民의

32) 國土開發研究院,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推進實績 評價(VI)』, 國土研 89-4, 1989, p. 213, 225.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과감한 投資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도시와의 삶의 질의 隔差를 좁히는 방법뿐이라 판단된다.

V. 맺음말

사람들은 왜 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移動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經濟的 側面에서 인구이동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이론을 소개하였다. 여러 기존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인구이동의 微視的 接近과 巨視的 接近을 구분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微視的 分析을 통한 實證的 分析이 어려운 것은 이론이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미시적 접근이 갖는 限界, 즉 개인들의 이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統計資料 및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巨視的 要因을 포함시켜 추정이 가능한 模型을 設定하고 이에 대하여 回歸分析方法을 이용하여 1966~1985년 사이의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특징은 전국에서 대·중·소도시 규모에 따라 선택한 24개 市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는 그 대부분이 年齡別, 男女性別, 教育程度 등 선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대상을 農村과 都市간의 이동 또는 대도시 및 道와 道 간의 인구이동으로 하였으나, 본 논문은 都市와 都市간의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實證分析을 함에 있어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크게 經濟的 要因, 非經濟的 要因, 그리고 政策的 要因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검증 결과 1966~1985년의 한국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은 도시간 實質賃金(소득)의 隔差 또는 就業機會의 差異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비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家族的 要因을 除外한다면 도시간의 教育機會의 差異가 전 조사대상기간에 있어서 한국의 인구이동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 되었으며, 두번째로는 60년대 중반, 7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중반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의 문화시설의 차이에 따른 快適度의 差異가 인구이동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각 도시의 주택 사정이나 조세 및 정부지출에 의한 政策的 要因 인구이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도시의 조세 부담 및 地域政府로부터의 혜택 등 財政政策的 變數는 인구이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Tiebout가설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政府形態 및 財政構造가 中央執權的인 形態를 취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가 주는 政策的 示唆點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過密地域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하여는 농어촌 및 지방에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적극 육성하여 居住地의 變更없이 취업 및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도시 및 낙후지역 주민의 자녀들에게 대도시와 거의 같은 수준의 劃期的인 良質의 教育機會를 擴大시킬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落後地域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文化施設 및 醫療惠澤의 擴大를 위한 政府의 과감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投資만이 한국의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대도시의 집중된 인구를 장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오늘날 서울 및 대도시의 심각한 交通問題, 環境公害問題, 住宅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한 계속적·집중적인 투자유인정책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나 환경공해문제 그리고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코 바람직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못 된다. 대도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投資財源을 우선 낙후된 도시나 지역에 양질의 교육, 문화시설의 확대에 사용하여 落後地域 住民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고, 지역간의 不均衡發展을 解消시키는 데 사회적 투자재원이 쓰여질 수 있는 정책개발과 투자만이 대도시의 인구집중문제를 해소하며 지역의 均衡發展을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附 錄〉

〈附表 1〉 都市別 센서스人口 및 純移動人口推定

(單位: 名)

區分	센서스人口				測 定 人 口				都市別 純移動人口推定 ¹⁾			
	① 1966년	② 1970년	③ 1975년	④ 1980년	⑤ 1985년	⑥ 1970년	⑦ 1975년	⑧ 1985년	66~70년 ②-⑥ NM70	70~75년 ③-⑦ NM75	80~85년 ④-⑧ NM85	
1. 서 울	3,793,280	5,525,262	6,879,464	8,350,616	9,625,755	4,154,893	6,046,073	8,964,052	1,370,369	833,391	661,703	
2. 부 산	1,426,019	1,876,391	2,450,125	3,156,931	3,512,113	1,561,961	2,053,259	3,388,839	314,430	396,866	123,274	
3. 대 구	845,189	1,080,819	1,309,131	1,603,781	2,028,370	925,761	1,182,697	1,721,595	155,058	126,434	306,775	
4. 인 천	525,827	643,384	797,143	1,081,831	1,384,916	575,954	704,029	1,161,302	67,430	93,114	223,614	
5. 광 주	403,495	501,967	606,468	727,259	905,673	441,960	549,282	780,683	60,007	57,186	124,990	
6. 대 전	314,991	413,823	506,223	651,358	865,687	345,019	452,830	699,207	68,804	53,393	166,480	
7. 마 산	154,600	190,768	371,597	386,496	448,498	169,338	208,750	414,888	21,430	162,847	33,610	
8. 전 산	220,432	262,300	311,237	367,037	426,382	241,446	287,024	394,000	20,854	24,213	32,382	
9. 울 산	112,848	159,433	252,281	417,848	550,207	123,606	174,461	448,543	35,827	77,820	101,664	
10. 수 원	127,733	169,967	223,718	310,104	430,487	139,909	185,988	332,884	30,058	33,730	97,603	
11. 청 주	123,666	143,679	192,453	253,008	350,044	135,455	157,222	271,594	8,224	35,231	78,450	
12. 군 산	102,327	112,034	154,456	165,046	185,474	112,082	122,594	177,790	-48	31,862	8,304	
13. 춘 천	65,927	122,448	140,397	155,205	162,869	109,569	133,990	166,606	12,879	6,407	-3,737	
14. 포 향	55,927	79,271	134,276	201,045	260,538	72,212	86,743	215,814	7,059	47,533	44,724	
15. 여 수	101,851	113,580	130,405	160,906	171,874	111,560	124,286	172,726	2,020	6,119	-852	
16. 원 주	103,810	111,856	120,133	136,737	150,994	113,706	122,400	146,781	-1,850	-2,267	4,213	
17. 경 주	85,728	92,024	108,351	121,855	127,459	93,900	100,698	130,806	-1,876	7,653	-3,347	
18. 의정부	74,642	94,209	108,223	133,070	162,572	81,758	103,089	142,845	12,451	5,134	19,727	
19. 순 천	79,293	90,820	107,995	114,177	121,880	86,852	99,381	122,564	3,968	8,614	-684	
20. 충 주	79,988	87,463	105,084	112,944	113,227	87,613	95,707	121,241	-150	9,377	-8,014	
21. 진 해	80,496	91,798	103,563	111,966	121,291	88,170	100,451	120,191	3,628	3,112	1,100	
22. 천 안	71,182	78,134	96,663	120,441	170,085	77,967	85,499	129,289	167	11,164	40,796	
23. 안 동	63,534	76,272	95,243	101,829	142,052	69,591	83,461	109,309	6,681	11,782	32,743	
24. 강 용	65,206	74,284	84,843	116,702	132,812	71,422	81,286	125,275	2,862	3,557	7,537	

資料: 經濟企劃院, 『人口센서스報告』, 1966.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1970, 1975, 1980, 1985.

註: 1) 는 本 論文의 研究目的에 따라 分析을 위하여 推定된 數値인 것으로 他用途로 使用할 때에는 注意를 요함.

〈附表 2〉 都市別賃金隔差指數 및 就業機會指數推定¹⁾

區分 地域(市)	賃金隔差指數 ²⁾				就業機會指數 ³⁾ (%)		
	70年 RWA 70	75年 RWA 75	85年 RWA 85	85年 MWA 85	70年 JOB 70	75年 JOB 75	85年 JOB 85
1. 서울	100.0	100.0	100.0	2,858,814	17.76	23.69	38.03
2. 부산	81.7	74.3	70.5	2,571,915	25.67	28.19	43.21
3. 대구	94.0	82.9	78.0	2,470,926	21.79	17.72	36.21
4. 인천	72.2	74.7	79.1	3,158,670	38.14	41.48	48.06
5. 광주	69.3	80.6	92.2	3,122,540	17.19	16.74	37.49
6. 대전	75.8	74.2	82.9	2,536,782	27.47	22.64	35.70
7. 마산	81.7	88.2	92.4	2,762,469	86.73	81.45	47.78
8. 전주	64.6	71.9	77.6	3,014,733	30.51	40.01	46.72
9. 울산	81.7	88.2	92.4	4,707,963	37.79	41.03	87.06
10. 수원	72.2	74.7	75.6	3,854,556	60.12	78.08	91.36
11. 청주	62.9	78.2	86.7	2,746,022	77.06	41.41	39.83
12. 군산	64.9	71.9	77.6	2,613,912	37.89	26.06	40.98
13. 춘천	67.4	98.5	82.9	2,323,971	33.73	26.15	44.08
14. 포항	94.0	82.9	80.8	5,089,264	35.91	53.72	48.57
15. 여수	69.3	80.6	92.2	2,444,139	50.71	21.46	21.31
16. 원주	67.4	98.5	93.4	2,059,315	65.86	27.25	23.69
17. 경주	94.0	82.9	80.8	2,402,032	12.08	15.33	14.79
18. 의정부	72.2	74.7	75.6	2,781,078	78.15	40.16	20.77
19. 순천	67.4	74.7	93.4	2,328,971	3.74	10.79	10.56
20. 충주	62.9	78.2	86.7	1,208,128	39.66	38.66	16.35
21. 진해	81.7	88.2	92.4	3,097,368	23.52	11.84	12.42
22. 천안	75.8	74.2	82.9	2,340,645	28.31	29.44	22.69
23. 안동	94.0	82.9	80.8	2,227,078	50.28	17.76	25.24
24. 강릉	67.4	98.5	93.4	2,132,623	95.14	22.67	22.38

資料：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書』, 1970, 1975, 1985.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72, 1976, 1986.

經濟企劃院, 『雇傭構造特別調查報告』, 1987.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 調查報告書』, 1987.

勞動廳, 『職種別 賃金調查結果報告書』, 1970.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5.

註：1) 本 論文의 研究目的을 위하여 각 도시의 상대적 임금격차 및 취업 기회의 차이를 추정한 것으로 타용도로 사용함에는 주의를 요함.

2) RMA 70은 勞動廳, 『職種別 賃金調查結果報告書』(1970)에 나타난 산업별, 지역별(도별) 근로자 월평균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道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고 이를 서울=100기준으로 하여 지수를 산정함.

RMA 75, RWA 85는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5)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함.

서울=100기준으로 한 각 道의 지수를 해당 市의 임금지수로 간주하여 적용함.

RWA 85는 도시별 소비자물가지수 1980=100을 기준으로한 1985년도 각 도시의 광공업 제조업 종업원의 추정된 연평균 실질소득임. (단위=원)

3) JOB70, JOB75, JOB85는 1970년, 1975년, 1985년도의 각지역의 취업난이도를 나타냄.

$$\frac{\text{해당연도의 각 시(市)의 전산업근로자수}}{\text{해당연도의 각 시(市)의 15~64세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수}} \times 100 = \text{취업기회}$$

〈附表 3〉 1971年度 地域別 綜合快速度指數 推定

區分 地域(市)	(1)	(2)	(3)	(4)	(5)	(6)	(7)	(8)	(9)	(10)	(11)	71年度 快速度指數 AM70
1. 서 울	34.2	86.0	33.4	54.2	99.5	54.2	18.0	27.4	43.1	23.0	64.7	537.7
2. 부 산	38.3	74.1	38.0	58.2	100.0	13.5	9.6	24.9	15.6	14.7	37.3	424.2
3. 대 구	13.0	75.0	3.5	48.0	100.0	6.9	9.2	4.1	5.1	5.6	1.5	272.2
4. 인 천	57.4	87.1	46.4	50.1	93.3	3.5	12.5	4.2	4.4	5.6	5.0	369.5
5. 광 주	27.1	57.6	55.4	59.0	92.9	2.9	12.8	6.4	2.7	3.5	24.4	344.7
6. 대 전	0.1	71.3	12.3	54.8	100.0	2.7	7.9	4.1	2.3	2.8	1.3	259.6
7. 마 산	22.2	81.2	27.8	64.8	94.9	0.1	8.5	3.3	1.1	2.3	3.4	309.6
8. 전 주	18.6	65.1	23.2	57.0	100.0	1.5	13.9	1.9	1.4	2.8	1.0	286.4
9. 울 산	32.0	51.9	22.6	58.6	69.1	0.7	6.5	0.4	1.6	2.3	24.2	269.9
10. 수 원	35.7	69.6	29.1	55.0	100.0	1.0	12.5	1.6	1.5	2.8	0.5	309.3
11. 청 주	5.6	58.8	13.0	65.8	88.0	0.9	7.4	1.4	1.0	2.3	0.0	244.2
12. 군 산	21.2	96.5	82.0	68.5	88.0	0.8	8.0	0.6	1.6	2.0	1.9	371.1
13. 춘 천	51.9	74.1	42.5	62.5	100.0	0.8	8.7	1.0	0.9	1.8	2.1	346.3
14. 포 향	0.1	80.3	0.1	65.5	98.9	0.5	8.4	0.7	0.8	1.5	0.0	256.8
15. 여 수	57.6	58.4	58.0	53.0	100.0	0.7	9.2	1.0	1.4	2.0	0.0	341.3
16. 원 주	33.6	54.1	17.0	59.6	95.7	0.5	10.8	1.3	0.7	1.5	0.2	275.7
17. 경 주	0.2	46.8	3.5	75.2	95.7	0.5	6.5	1.1	0.8	2.0	6.6	238.9
18. 의정부	92.8	29.4	25.1	58.5	90.6	0.5	12.8	0.9	1.5	0.8	0.5	313.4
19. 순 천	16.3	77.0	25.0	71.0	100.0	0.4	4.1	1.2	0.9	1.3	10.9	308.1
20. 충 주	15.0	56.2	9.1	71.0	100.0	0.5	9.1	1.1	0.7	1.5	0.0	264.2
21. 진 해	24.7	71.1	60.0	62.6	100.0	0.4	5.3	0.3	0.7	1.0	0.4	326.5
22. 천 안	0.5	53.0	12.3	70.1	66.7	0.5	5.6	1.0	0.6	1.8	0.0	212.1
23. 안 동	0.3	83.6	6.2	66.1	100.0	0.5	9.1	0.3	0.6	1.0	0.0	267.7
24. 강 릉	31.5	34.4	3.8	66.2	81.6	0.3	8.8	0.3	0.8	1.3	0.6	229.6

資料：내무부, 『韓國都市年鑑』, 1972.

註：本 研究를 위하여 각지역의 상대적 쾌적도를 추정한 것으로 타용도로 사용함에는 주의를 요함. (70년도 자료를 구할 수 없어 71년도자료를 이용함)

(1) 도로포장율, (2) 상수도보급율, (3) 하수도보급율, (4) 주택보급율, (5) 쓰레기 수거율, (6) 조사대상지역 총병원수 대비 각도시의 병원수 비율; 양적, 상대적 의료 시설차이로 간주함. (7) 각 도시별 인구 1만에 대한 의사, 한의사, 간호원 등 의료업 자수; 질적, 상대적 의료혜택 차이로 간주함, (8) 사회복지시설비율; 유아원, 양로 원, 정신질환 및 부랑인, 윤락여성보호시설 등 수용능력 총수 대비 각 도시 수용능력 비율 (9) 시경찰 공무원 총수대비 각 도시 경찰공무원수 비율, (10) 시 소방장비총 수 대비 각 도시 소방장비비율, (11) 도시공원총면적대비 각 도시 공원면적비율+도시어린이놀이터 총면적 대비 각 도시 어린이놀이터 면적비율.

〈附表 4〉 1975年度 地域別 綜合快速度指數 推定

區分 地域(市)	(1)	(2)	(3)	(4)	(5)	(6)	(7)	(8)	(9)	(10)	(11)	75年度 快速度指數 AM 75
1. 서 울	48.0	89.3	75.5	48.1	97.0	52.6	17.9	23.3	44.3	28.5	71.9	596.4
2. 부 산	49.6	78.0	44.8	50.0	95.1	13.8	5.0	23.9	13.9	10.2	2.0	386.3
3. 대 구	39.8	81.0	36.9	47.8	100.0	6.6	11.0	9.4	7.7	3.1	11.0	354.3
4. 인 천	60.9	89.0	53.2	46.7	95.0	3.8	7.2	6.8	4.2	1.8	0.1	368.7
5. 광 주	17.4	67.5	57.8	56.9	97.1	2.6	16.3	4.5	2.8	6.2	0.1	329.2
6. 대 전	24.4	76.0	41.4	57.7	80.2	2.6	11.9	3.9	2.5	3.6	9.3	313.5
7. 마 산	56.3	54.3	28.4	52.1	84.2	1.6	3.6	4.3	1.6	3.3	0.0	289.7
8. 전 주	25.8	71.8	32.2	54.7	95.7	1.5	15.7	1.9	1.8	3.6	0.2	304.9
9. 울 산	37.8	61.6	53.8	51.2	95.7	1.0	7.6	0.6	1.5	2.7	0.6	314.1
10. 수 원	43.4	68.4	34.9	56.8	85.0	1.2	2.9	0.0	1.4	1.7	0.2	295.9
11. 청 주	19.8	71.0	44.3	59.0	95.0	1.0	9.2	0.8	1.4	0.7	0.1	302.5
12. 군 산	28.0	84.4	30.0	56.0	90.0	1.0	4.0	2.1	1.4	2.0	1.4	300.3
13. 춘 천	69.7	81.6	70.0	64.4	98.0	0.1	13.5	1.4	(0.9)	1.2	56.9	457.7
14. 포 향	2.7	74.0	24.7	57.7	100.0	0.1	14.8	0.6	1.2	1.2	0.0	277.0
15. 여 수	39.0	68.7	61.2	61.0	100.0	0.1	2.4	0.9	0.9	2.0	0.0	336.2
16. 원 주	66.0	63.3	19.0	60.8	88.7	0.1	21.0	1.6	(0.8)	1.2	11.9	334.4
17. 경 주	74.6	50.7	54.4	66.8	100.0	0.0	6.7	0.9	1.1	2.1	0.2	357.5
18. 의정부	93.2	71.0	36.9	50.6	100.0	0.0	11.8	0.1	(0.5)	0.7	0.1	364.9
19. 순 천	19.5	61.1	87.4	73.5	100.0	0.0	7.5	1.1	0.9	2.0	2.9	355.9
20. 충 주	26.7	73.2	48.0	68.2	100.0	0.1	7.2	0.6	1.0	1.6	0.1	326.7
21. 진 해	23.4	71.9	71.6	68.6	94.0	0.0	4.1	0.8	0.6	1.7	0.3	337.0
22. 천 안	48.0	52.0	31.0	66.4	74.0	0.1	7.1	1.5	0.9	1.7	0.0	282.7
23. 안 동	32.4	76.7	21.2	56.5	100.0	0.0	12.3	0.3	0.5	1.4	0.0	301.3
24. 강 룡	85.0	58.1	56.0	69.0	86.0	0.0	9.4	0.4	0.8	1.1	12.6	378.3

資料：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76.

註：본 연구를 위하여 각 지역의 상대적 쾌적도를 추정한 것임으로 타용도로 사용함에는 주의를 요함.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각 번호에 대한 설명은 <부표 >과 같음.

(10) 시 소방공무원 총수대비 각 도시 소방공무원수 비율

()안의 숫자는 타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임.

〈附表 5〉 1985年度 地域別 綜合快適度指數 推定

區分 地域(市)	(1)	(2)	(3)	(4)	(5)	(6)	(7)	(8)	(9)	(10)	(11)	85年度 快適度指數 AM85
1. 서울	83.0	97.5	93.0	51.2	100.0	44.2	40.4	26.7	34.3	22.2	33.8	626.3
2. 부산	70.1	93.0	71.2	52.1	100.0	13.1	24.3	23.5	12.9	9.9	8.8	478.9
3. 대구	70.8	94.0	55.7	50.6	100.0	7.2	22.7	9.3	8.0	6.0	11.7	436.0
4. 인천	65.0	93.5	64.2	59.3	97.0	3.7	15.6	3.8	4.8	3.5	2.8	413.2
5. 광주	67.9	85.1	62.5	53.3	94.1	3.2	22.5	5.6	2.8	1.2	15.4	413.6
6. 대전	62.7	84.9	48.9	56.1	95.0	3.4	31.5	5.9	3.0	3.5	2.5	397.4
7. 마산	82.9	87.0	64.2	49.8	100.0	1.7	23.0	0.6	1.8	1.3	1.3	413.6
8. 전주	63.0	85.1	92.7	59.0	100.0	1.4	30.9	1.6	1.7	1.4	0.3	437.1
9. 울산	33.0	83.5	37.6	55.3	98.0	1.5	15.7	0.2	1.7	1.7	0.1	328.3
10. 수원	73.3	88.0	65.0	56.3	95.0	1.4	18.3	0.7	1.1	1.5	0.3	400.9
11. 청주	47.2	86.0	58.7	56.5	100.0	1.0	18.3	1.0	1.3	1.4	0.0	371.4
12. 군산	46.5	95.7	35.5	64.8	100.0	0.6	14.9	1.1	0.8	1.0	0.0	360.9
13. 춘천	90.5	88.8	31.5	63.3	78.4	0.5	22.6	0.8	0.8	1.0	0.0	378.2
14. 포항	69.0	87.5	57.5	57.5	100.0	0.7	18.2	0.4	0.9	1.0	0.0	392.7
15. 여수	57.1	91.4	32.0	63.0	100.0	0.5	14.0	0.5	2.0	1.3	0.0	351.8
16. 원주	81.2	84.0	49.2	67.1	95.0	0.4	42.0	0.7	0.6	1.9	0.0	421.1
17. 경주	76.7	65.4	71.2	59.3	100.0	0.3	14.2	0.4	0.7	1.5	0.8	390.5
18. 의정부	81.2	71.0	57.0	50.6	97.0	0.5	21.3	0.4	1.4	0.8	0.0	381.2
19. 순천	67.8	82.3	52.7	69.0	96.0	0.5	29.0	0.5	0.8	1.1	0.0	399.7
20. 충주	36.0	86.0	80.6	67.4	100.0	0.4	14.8	0.7	0.5	1.2	0.0	387.6
21. 진해	70.3	86.5	50.8	64.7	100.0	0.3	8.6	0.2	0.7	1.0	0.3	383.4
22. 천안	76.7	55.1	58.0	56.8	96.0	0.6	34.1	0.4	0.7	1.3	0.0	380.6
23. 안동	42.6	82.0	66.2	56.8	95.0	0.4	15.7	0.3	0.5	0.9	0.0	360.4
24. 강릉	95.4	82.8	44.8	62.2	100.0	0.4	10.0	0.3	0.6	0.9	0.0	397.4

資料：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6.

註：본 연구를 위하여 각지역의 상대적쾌적도를 추정한 것임으로 타용도로 사용함에는 주의를 요함.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각 번호에 대한 설명은 <부표 3>과 같음.

(9) 경찰서, 지파출소 총수대비 각 도시의 경찰서, 지파출소수 비율.

〈附表 6〉 地域別, 年度別 1人當租稅負擔額

區分 地域(市)	1人當總租稅負擔額(원)			1人當地方稅負擔額(원)		
	70年	75年	85年	70年	75年	85年
	TTAX 70	TTAX 75	TTAX 85	LTAX 70	LTAX 75	LTAX 85
1. 서 울	34,000	72,783	434,236	3,000	10,20	68,079
2. 부 산	19,249	84,275	153,099	2,123	6,506	48,729
3. 대 구	13,878	35,413	128,546	1,700	5,313	39,108
4. 인 천	22,916	15,537	310,390	971	3,628	55,070
5. 광 주	12,447	34,396	109,800	954	4,603	32,331
6. 대 전	13,894	31,045	131,005	816	4,083	41,874
7. 마 산	18,426	47,065	552,176	1,302	4,330	36,500
8. 전 주	12,713	21,050	135,544	1,702	4,277	33,057
9. 울 산	17,509	36,780	604,553	1,459	9,324	53,955
10. 수 원	21,035	96,967	327,486	964	4,740	54,095
11. 청 주	11,369	30,238	129,253	528	4,628	41,732
12. 군 산	38,851	79,275	291,550	1,560	4,330	34,258
13. 춘 천	10,807	17,295	149,176	787	3,905	33,286
14. 포 향	7,814	27,038	198,715	1,412	6,024	64,233
15. 여 수	13,388	67,386	78,659	1,006	3,063	25,884
16. 원 주	6,703	20,089	117,016	499	2,890	29,680
17. 경 주	4,198	11,226	117,501	1,149	2,920	37,837
18. 의정부	4,732	15,758	116,854	559	3,440	31,070
19. 순 천	8,587	17,496	59,341	654	2,268	23,305
20. 충 주	7,381	18,681	83,025	688	2,615	24,958
21. 진 해	8,629	15,796	82,907	583	3,896	22,724
22. 천 안	6,823	21,052	139,040	1,053	3,237	27,350
23. 안 동	6,893	14,586	91,852	909	3,538	25,495
24. 강 릉	17,398	35,016	90,375	514	4,453	28,044

資料: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71, 1976, 1986, 1988.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71, 1976, 1986.

〈附表 7〉 地域別, 年度別 1人當歲出額

區分 地域(市)	1人當總歲出額(원)			1人當公共事業및福祉厚生支出額(원)		
	70年	75年	85年	70年	75年	85年
	TEXP 70	TEXP 75	TEXP 85	WEXP 70	WEXP 75	WEXP 85
1. 서 울	12,872	25,829	176,835	3,919	8,876	135,929
2. 부 산	11,653	22,944	152,654	3,543	5,289	124,512
3. 대 구	7,276	17,714	96,411	2,172	5,656	72,826
4. 인 천	8,807	14,081	118,950	2,537	4,103	84,619
5. 광 주	7,953	12,892	107,660	1,941	4,714	78,060
6. 대 전	6,122	13,209	93,156	2,181	4,647	69,287
7. 마 산	8,494	15,433	77,926	1,745	4,188	52,037
8. 전 주	7,218	15,009	79,273	2,729	3,493	55,311
9. 울 산	16,684	8,545	101,367	3,100	4,859	70,477
10. 수 원	8,594	14,423	100,423	2,801	2,387	75,524
11. 청 주	6,024	14,878	109,626	4,095	5,523	78,241
12. 군 산	7,369	16,152	121,315	3,633	4,600	87,373
13. 춘 천	8,924	16,539	162,657	2,657	5,365	117,720
14. 포 향	5,596	11,911	137,104	1,983	4,296	113,282
15. 여 수	6,576	13,758	103,286	1,477	4,554	66,295
16. 원 주	13,055	14,832	126,933	1,854	3,767	91,670
17. 경 주	7,894	21,120	155,628	3,248	5,028	103,248
18. 의정부	5,445	17,290	125,526	1,808	5,217	96,881
19. 순 천	5,846	15,655	89,811	2,316	5,186	57,084
20. 충 주	6,339	13,107	125,605	2,374	3,723	73,143
21. 진 해	5,293	14,963	77,937	2,154	5,179	38,920
22. 천 안	6,586	14,636	76,898	2,610	4,035	46,923
23. 안 동	5,876	15,728	86,228	4,482	6,376	48,189
24. 강 릉	6,096	21,323	169,399	2,664	8,755	128,285

資料：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1, 1976, 1986.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71, 1976, 1987.

〈附表 8〉 都市別 住宅普及率 및 教育機關數

區分 地域(市)	住 宅 普 及 率			教 育 機 關 數		
	1971年 HOUS 70	1975年 HOUS 75	1985年 HOUS 85	1970年 ED 70	1975年 ED 75	1985年 ED 85
1. 서 울	54.2	48.1	51.2	568	632	1,049
2. 부 산	58.2	50.0	52.1	244	279	457
3. 대 구	48.3	47.8	50.6	138	147	270
4. 인 천	50.1	46.7	59.3	108	125	187
5. 광 주	59.0	56.9	53.3	90	120	157
6. 대 전	54.8	57.7	56.1	78	90	160
7. 마 산	64.8	52.1	49.8	30	55	55
8. 전 주	57.0	54.7	59.0	55	69	85
9. 울 산	58.6	51.2	55.3	(41)	41	72
10. 수 원	55.0	56.8	56.3	28	43	67
11. 청 주	65.8	59.0	56.5	31	49	67
12. 군 산	68.5	56.0	64.8	28	37	47
13. 춘 천	62.5	64.4	63.3	31	37	40
14. 포 향	65.5	57.7	57.5	25	25	83
15. 여 수	53.0	61.0	63.0	20	21	30
16. 원 주	59.6	60.8	67.1	24	31	36
17. 경 주	75.2	66.8	59.3	24	37	36
18. 의정부	58.5	50.6	50.6	15	17	25
19. 순 천	71.0	73.5	69.0	(20)	20	30
20. 충 주	71.0	68.2	67.4	21	21	27
21. 진 해	62.6	68.6	64.7	13	28	30
22. 천 안	70.1	66.4	56.8	22	22	37
23. 안 동	66.1	56.5	56.8	20	25	33
24. 강 릉	66.2	69.0	62.2	25	25	37

資料：內務部, 『都市年鑑』, 1972, 1976, 1986.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71, 1976, 1986.

參 考 文 獻

1.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61, 1966, 1980, 1985.
2. _____, 『都市家計年報』, 1970, 1976, 1980, 1985.
3. _____, 『人口 및 住宅센서스 暫定報告』, 1980.
4. _____,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確定結果 報告』, 1987.
5. _____, 『人口移動統計年報』, 1986, 1988.
6. _____, 『韓國의 社會指標』, 1985, 1986, 1988.
7. 經濟企劃院・韓國人口保健研究院, 『人口移動 特別調查-제1차 報告書-』, 1983.
8. _____, 『1983 人口移動 特別調查』, 1985.
9. 郭承滌・李榮善, 『韓國經濟의 構造와 政策』, 韓國經濟新聞社, 1984.
10. 具成烈,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經濟的 要因과 影響,” 『人口移動과 社會經濟 發展』,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11. 國土開發研究院, 『제2차 國土開發計劃의 推進 實績 評價(VI)』, 國土研 89-4, 1989.
12. 金大泳・李孝求,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 1965~70』, 研究・調查報告 第76-01권, 韓國開發研究院, 1976. 5.
13. 金善雄・Repetto, R. 外 2人, 『韓國의 經濟發展과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83.
14.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71, 1976, 1981, 1986.
15. _____, 『地方財政年鑑』, 1971, 1976, 1988.
16.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0, 1985, 1988.
17.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中心, 『韓國의 都市人口集中現象과 그 經濟的 要因』, 1976.
18. 文八龍・潘性紈・Perkins, D.H.,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研究院, 1981.
19. 裴茂基, 『勞動經濟學』, 經文社, 1985.
20. 石賢浩, “人口移動과 都市化의 經濟的 側面,” 韓相福・權泰煥 編, 『經濟人口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21. 成潛根, “韓國의 農村과 都市 地域間 人口移動,” 博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8.
22. 宋丙洛·Mills, E.S., 『成長과 都市化問題』, 韓國開發研究院, 1984.
23. 沈定根, 『都市財政의 諸問題』, 서울시立大學校出版部, 1987.
24. 俞景文, “韓國의 人口移動 決定要因(1980~1985)과 租稅 및 政府支出變化가 人口移動에 미치는 效果分析,” 『產業과 經營』, 25卷 2號, 延世大學校, 1988. 10, pp. 113~138.
25. 尹錫範, 『計量經濟學』, 法文社, 1987.
26. _____, “우리나라의 地域間 人口移動에 있어서 所得隔差 假說 檢定,” 『統計學研究』, 第6卷 1號, 1977. 6, pp. 47~63.
27. 尹鍾周, 『農村人口에 관한 研究』, 1974.
28. _____, “個人的 移動史에 관한 研究,”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29. 人口問題研究所, 『우리나라 人口移動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調查研究』, 1969.
30. 趙淳·鄭暢泳 外 8인,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31. 朱鶴中, 『한국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32. _____, 『한국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1982.
33. 崔仁鉉·鄭榮一·卞俗榮,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34. _____, 『한국의 死亡水準 및 人口移動趨勢』,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4.
35. 韓國開發研究院,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 1960~2040』, 研究·調查報告 第75-11卷, 1975.
36. 韓國生產性本部, 『우리나라의 物價構造와 變動要因 分析』, 生產性研究 第99輯, 1969. 6.
37. _____, 『韓國產業에 있어서의 勞動人口의 動態分析』, 1964. 12.
38. 韓國人口保健研究院,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人口 및 保健 醫療 部門』, 1985.

39. 韓相福・權泰煥, 『經濟人口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40. 洪起容, 『地域經濟論』, 博英社, 1985.
41.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85.
42. 黃明燦, 『地域開發論』, 經營文化院, 1985.
43. 黃仁政,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연구보고 83-10, 韓國開發研究院, 1983.
44. Amundsen, E.S., "Moving Costs and the Microeconomics of Intra-Urban Mobilit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15, 1985, pp. 573~583.
45. Becker, G.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Vol. 75, Sep. 1965, pp. 493~517.
46. _____, *The Econ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47. Bowls, S., "Migration as Investment: Empirical Tests of the Human Investment Approach Geographical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2, 1970, pp. 356~362.
48. Brown, A.A., and E. Neuberger, *Internal Mig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49. Cebula, R.J.,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the Migration-Impact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Public Finance*, Vol. 34 No. 1, 1979, pp. 69~84.
50. Cebula, R.J., and R.K. Vedder, "A Note on Migration, Economic Opportunity,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3 No. 2, 1973, pp. 205~211.
51. Clark, D.E., and J.R. Kahn, "The Social Benefits of Urban Cultural Ameniti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8, Aug. 1988, pp. 363~377.
52. Cushing, B.J., "A Note on Specification of Climate Variables in Models of Population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7, 1987, pp. 641~649.
53. DaVanzo, J., "Microeconomic Approaches to Studying Migration

- Decisions,”: in De Jong, G.F. and R.W. Garduer(eds.), *Migration Decision Making*,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pp. 92~94.
54. De Jong, G.F., and R.W. Gardner,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55. Diamon, D.B., and G.S. Tolley, *The Economics of Urban Amenities*,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56. Dickie, M., and S. Gerking, “Interregional Wage Differentials: An Equilibrium Perspectiv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7, Nov. 1987, pp. 571~585.
57. Edel, M., and E. Sclar, “Taxes, Spending, and Property Values: Supply Adjustment in a Tiebout-Oates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Sep./Oct. 1974, pp. 941~955.
58. Freedman, R., “Issue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 Fertility Survey Data,” Paper No. 62,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79.
59. Gallaway, L.E., R.F. Gilbert and P.E. Smith, “The Economics of Labor Mobility: An Empirical Analysis,” *Western Economic Journal*, Vol. 5, 1968, pp. 211~223.
60. Gardner, R.W., “Macrolevel Influence on the Migration Decision Process,”: in De Jong G.F. and R.W. Gardner(eds.), *Migration Decision Making*,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pp. 67~69.
61. Greenwood, M.J.,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 Labor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1, 1969, pp. 189~194.
62. _____,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3, 1975, pp. 397~433.
63. _____, “Human Migration: Theory,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5 No. 4, 1985, pp. 521~544.

64. _____, "Lagged Response in the Decision to Migrat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0, 1970, pp. 375~384.
65. Gupta, M.R., "Migration, Welfare, Inequality, and Shadow Wage," *Oxford Economic Papers*, Vol. 40, Sep. 1988, pp. 477~504.
66. Haurin, D.R., and R.J. Haurin, "Net Migration, Unemployment, and the Business Cycl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8, May 1988, pp. 239~254.
67. Hicks, J.R., *The Theory of Wages*, London: McMillan, 1932.
68. Hoch, I., and J. Drake, "Wages, Climate,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Environment Economics and Management* 1, 1974, pp. 268~295.
69. Isard, W.,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Englewood Cliffs, 1975.
70. Katz, E., and O. Stark, "Migration, Information and the Costs and Benefits of Signalling,"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17, 1987, pp. 323~331.
71. Knapp, T.A., and P.E. Graves, "On the Role of Amenities in Models of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9, Feb. 1989, pp. 71~87.
72. Koide, H., "Spatial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with Spillover Effec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18, 1988, pp. 283~305.
73. Krumm, R., and A. Kelly, "Multiperiod Migration Patterns: The Timing and Frequency of Household Respons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8, May 1988, pp. 255~270.
74. Lee, E.S., "A Theory of Migration," in Jackson, J.A.(eds.), *Migr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p. 282~297.
75. Lie, B.C., "Differential Net Migration Rate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7, 1975, pp. 329~337.
76. Lowry, I.S., *Migration and Metropolitan Growth: Two Analytical Models*,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1966.

77. Mincer, J.,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No. 5, 1978, pp. 749~773.
78. Mueller, C.F., *The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A Behavior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79. Nakagome, M., "Urban Unemployment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Labor Markets: An Examination of the "Todaro Paradox" in a Spatial Contex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9, May 1989, pp. 161~170.
80. Renas, S.M., and R.J. Cebula,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Social and Economic Studies*, Vol. 25, 1972, pp. 61~71.
81. Renas, S.M., "An Empirical Note on the Tiebout-Tullock Hypothesis: Com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4, May 1980, pp. 619~623.
82. Riew, J., "Migration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3 No. 1, 1973, pp. 65~76.
83. Samuelson, E.S., "Moving Costs and the Microeconomics of Intra-Urban Mobilit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15, 1985, pp. 573~583.
84. Schachter, J., and P.G. Althaus, "An Equilibrium Model of Gross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9, May 1989, pp. 143~159.
85. Schultz, T.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Mar. 1961, pp. 1~17.
86. _____, "Reflection on Investment in M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1962, pp. 51~58.
87. Shaw, R.P., *Migration Theory and Fact*, Philadelphia: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1975.
88. Sjaastad, L.A.,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Supplment), 1962, pp. 80~93.
89. Tiebout, C.M., "Export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 Political Economy*, Vol. 64 No. 2, 1956, pp. 160~164.
90. _____,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4, 1956, pp. 416~424.
91. Todaro, M.,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1969, pp. 138~148.
92. Toney, M.B., "The Simultaneous Examination of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Destination Selections : Employi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Demography*, Vol. 15, 1978, pp. 205~212.
93. Trigg, A., "The Spatial and Distributional Impacts of Public Expenditure Programmes: A Social Accounts Approach,"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61, 1987, pp. 21~38.
94. Turnbull, G.A., "The Effects of Local Taxes and Public Services on Residential Development Pattern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8, Nov. 1988, pp. 541~562.
95. Vanderkamp, J., "Migration Flows, Their Determinants and the Effects of Retur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9, 1971, pp. 1012~1032.
96. Yoo, K.M., "A Re-examination on the Tiebout Hypothesis and Migration: A Case Study on the City and State Government in the U. 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2, 1987, pp. 173~196.
97. Zodrow, G.R., *Local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e Tiebout Model after Twenty Five Year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